



3년

"농업 말살 통상협상,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전주매일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음 5월 4일) 제37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낙후된 섬, 지속가능 성장 거점으로

도서지역에 1071억 투입

도, 섬발전촉진법 근거
섬종합개발 따라 추진
섬발전사업 총 979억
섬 특성화 총 82억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인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총 1,07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섬 발전 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인도교의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인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총 1,07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섬 발전 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인도교의 모습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을 단순한 외딴 공간이 아닌, 관광과 소득, 안보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미래 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섬발전촉진법'에 근거한 제4차 섬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라 추진되며, 군산·고창·부안 등 3개 시군의 유인도서 25곳, 주민 약 3,981명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 사업인 '섬발전사업'에는 총 979억원이 투입된다.

섬별 도로, 방파제, 물양장, 인도교, 관광로 등 총 55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현재까지 2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군산 선유도의 내부 관광로, 고창 내죽도의 방파제가 완공됐다.

올해 말까지는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등 11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교통 편의성과 관광 접근성을 높여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모델이다. 말도, 무녀도 등 8개 섬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82억원이다.

섬당 최대 50억원까지, 최대 9년간 4단계로 나눠 지원된다. 2025년에는 개야도, 아미도, 신시도 등에 오토캠핑장, 어촌관광농원 등 지역 맞춤형 특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관광수요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연료난 해소 위해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산 개야도·어청도·연도, 부안 위도(식도) 등 8개 섬, 총 676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안전설비 등을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73억원이며, 현재까지 3개 섬에 설치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개야도, 연도, 식도 등 4개 섬에 약 7억원 규모의 시설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로 무인화 위기에 놓인 작은 섬을 살리기 위한 '공도(空島) 방지사업'도 추진된다. 대상지는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관광 개발, 호안 정비, 태양광 설비, 접안시설 등 기본적인 정주 인프라에 4.3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확보해 주민 유출을 막고, 생존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도·하왕도 등 전북 3개 섬이 지정됐다. 이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외곽 도서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영토 수호 기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섬을 대상으로 총 237억원 규모, 18개 사업을 발굴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오는 7월 중 정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김영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더 이상 낙후된 외딴 공간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해양주권 수호의 전초기지"라며, "관광·문화·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전략적 가치를 키워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JOB 박람회 내달 5일 군산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은 오는 6월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테크노파크, GSCO 등이 공동 주관하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고용특구 지정과 이차전지 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에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정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주요 대학을 비롯해 공공기관, 공기업, 이차전지 중심의 40여 개 유망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과 기관은 부스를 운영하며 채용정보 제공, 현장 면접,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구직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고용 지원 사업 홍보와 구직자 모집, 기업 채용 연계, 취업 사전활동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줄 길게 늘어선 사전투표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 도내 사전투표율 32.69%

20대 대선보다 7.15%p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 전북의 투표율은 32.69%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7.15%p 높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1일차 전북 전체 선거

인수 151만908명 중 49만3,865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 완산 29.39%, 전주 덕진 29.04%, 군산 30.07%, 익산 32.14%, 정읍 36.75%, 남원 38.28%, 김제 37.62%, 완주 33.75%, 진안 40.60%, 무주 36.81%, 장수

39.53%, 임실 40.26%, 순창 45.51%, 고창 39.21%, 부안 37.49% 등이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에서 첫날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153만3,125명 중 39만1,553명이 사전투표, 25.54%를 기록했다.

/김재훈 기자

도민의 소중한 한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 오늘까지 대선 사전투표

전략적 기업유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유관부서 회의... 민선8기 투자유치 195건·14조9000억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며 전략적인 기업유치 기반 조성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가시적인 유치 성과를 토대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청 경제부지사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기업유치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관련 9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95건, 약 14조9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조7,000억원 이상이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연평균 5조 원 이상을 유치한 셈이다.

도는 이를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도의 현재 유치전략도 함께 공유됐다. 특히 전주(탄소융합, 방산, 바이오, 핀테크), 군산시(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익산시(식품, 홀로그램) 등 시군별 중점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타깃 기업 발굴, 도·시군 공동 IR(투자설명회) 추진, 투자자문관 운영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이 소개됐다.

도는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20명을 '산업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자문관단은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 방위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식품, 에너지 등 8개 산업 10대 세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기업유치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종합적 과제"라며 "각 부서의 역량과 정책을 연계해 전북을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관부서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투자유치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